

# “과학은 경쟁력이다”

김영환 국회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중반을 넘어섰다. 지경위원회는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미래위원회’의 성격이 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과연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해온 것을 종합해보면 느끼는 점이 있다. 국가 경쟁력은 거창한 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한 현장 안에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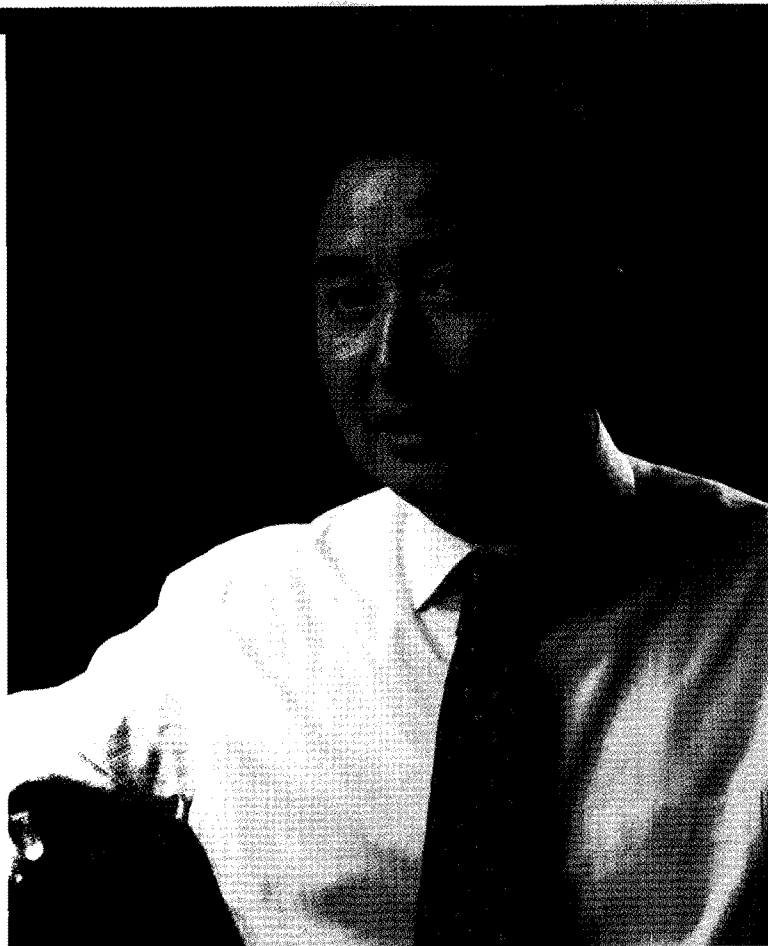
## 실천적인 정책 만드는 국회의원

최근 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1.3%로 중산층을 이루는 큰 축이다. 자영업은 고용의 산실이자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몰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년간 하루 168개, 월 5천 개의 자영업소가 사라졌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국가의 짐으로 돌아왔다.

지경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또한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을 만들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8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웅장하고 담대한, 그러나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실천적인 정책을 만들었다.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카드수수료의 인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척결 등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바뀌기는 것이다. 그동안 과도한 백화점 입점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얼마전 공정위가 드디어 백화점 업계에 중소기업의 입점 수수료를 낮추라고 요청했다. 탄탄한 서민경제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이공계 살리기도 마찬가지다. 과학은 국가 경쟁력이다. 산업 현장에 가보면 이공계 인력,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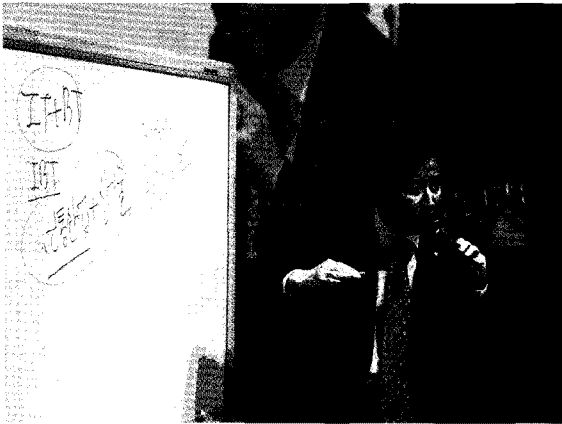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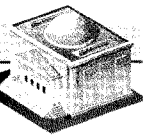


체감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없다. ‘이공계를 살리자’는 구호성, 혹은 면피용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담아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영국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칭화대 수리공학과를, 경제학과 출신일 것 같은 대처 전 총리는 옥스퍼드 화학과 출신이다.

중국 정계의 이공계 사랑은 남다르다. 최고 고위직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이과출신이며, 후진타오 주석은 대학졸업 후 간쑤성 수력발전 댐공사 현장에서 과학기술 관료로 근무했다. 중국 차기지도자로 지목된 시진핑 부주석 역시 칭화대 공정화학과를 졸업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을 공부하고 양자 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획득한 과학인이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에 입문한 뒤 “정치는 과학처럼 실험을 할 순 없지만 정치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닮았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부를 부활하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이공계를 살려야 한다. 매킨지는 '인재전쟁' 보고서에서 지식기반의 미래사회에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구글과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2005년 중국계 컴퓨터공학자 '카이 푸 리'를 두고 인재

전쟁을 벌인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낮다. 과학지식이나 기술소유자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관료, 즉 '테크노크라트'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고위공무원단에서 이공계 출신은 고작 26%이다. 또한 국회에서 자연계 출신 국회의원은 5%에 불과하다.

나는 과학기술부 장관시절,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부산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여성과학자 지정할당제, 기초과학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후,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은 교육행정에 밀렸다.

수능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공계보다는 의대, 법대를 지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의대, 법대에 진학하면 명예와 경제적 풍요가 보장된다. 취업통계를 보면 자연계열 박사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46%에 불과하다. 게다가 정규직 취업률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영국에서는 과학기술관리자를 임용하기 하기 위해 과학기술직 속성임용제를 비롯해 각종 승진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과학기술인력 우대조치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 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우리나라 역시 미래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이공계 대학생 병역특례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 **ST**

###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한국의 GDP는 9천863억 달러로 G20 회원국 중 14위이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5위 안팎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007년 2만 달러의 목표를 이룬 후 답보상태다. 최근 1만 달러 대로 감소했다가 3년 만에 2만 달러 고지를 되찾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경제 연례 협의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로는 2015년이 되어도 선진국 진입의 고지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에의 투자는 장기적 저성장과 저소비,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말' 시대에 자원빈국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나는 지난 199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미국 쉐플러사의 불평등한 기술료 배분문제를 짚어내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술료 배급을 받도록 한 바 있다. 1992년 쉐플러와 ETRI가 공동으로 투자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셀룰러 이동통신 기술을 만들어냈으나 당시 쉐플러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국정감사 지적 후, ETRI는 국제중재재판소 재판을 통해 2008년까지 15년간 약 3천183억 원의 기술료를 지급 받았다. 단 하나의 과학기술 개발로 웬만한 중견기업의 순매출액의 효과를 낸 것이다.



## “과학기술인 평생지원정책 수립에 혼신 다할 것”

서상기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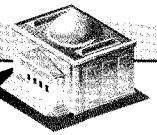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장으로,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과학기술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주요 법안들이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로서 맹활약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르네상스를 가져 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계 수준의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촉진시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총 61건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핵심정책으로 대한민국 미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야 간 쟁점으로 교과위 법안처리가 힘든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굵직 굵직한 법들이 과학기술계의 열정과 단합된 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여당 간사로서 정부와 함께 추진했던 주요 성과를 들면, 우선, 기초원천 연구 진흥 및 미래 전략기술 개발 강화이다. 연구개발사업 진화 및 원천기술분야 투자확



대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핵융합장치·가속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증진 및 안정적 국가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시켜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첨단 우주기술 자립화 추진이다. 핵심기술 자립, 위성 및 발사체 독자개발, 성과활용 및 산업화 촉진, 국제협력 다변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주기초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나로호 2차 발사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 착수, 주요 우주강국과의 협력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기반 확충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다. 인재 개발 지원시스템 확충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를 통해 고교 교육 정상화 및 대입전형을 선진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와 학생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초·중등부터 국가과학자까지 전 주기적 과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과학이 통합

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로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이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학의 선도 모델 창출·확산을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을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의 체제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가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지역산업 발전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체제 개선 및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이다. 산학협력 활성화 및 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대학을 퇴출시키는 등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과학기술정책은 교육정책과 맞물려 추진해야

교육과학기술부 전체 예산이 44조 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교육 관련 예산이 41조 원, 과학기술 관련 예산이 3조 원 정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이 뒤로 밀릴



▶ 입학사정관들과 함께 하는 대구지역 교육발전 정책토론회(2011. 7. 21)

수밖에 없다. 현 정부조직 체제 내에서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결국 과학기술계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원래 통합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원 정년 환원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우수한 연구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더 했는데도 안 될 때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다시 분리하는 것이 맞다.

현재 큰 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내용 상으로는 초일류 과기강국 정책을 펴야 한다. 분야에 관계없이 일류기술, 일등상품을 만들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아직 세계 최고기술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공계 노벨수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따라서 첨단산업, 미래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부문에서 일류를 지향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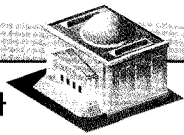
특히 과학기술정책은 교육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성과가 있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들이 만드는 기술이 산업화로 열매 맺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초가 탄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니, 훌륭한 대기업들이 큰 느티나무처럼

받쳐주고 있어도 제대로 잎과 꽃이 피어나지 못한다. 기초 과학 분야와 기초기술 분야가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기초 과학벨트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교과부가 잘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부러운 일이지만,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부모들이 과학자라는 것이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과학자인 부모들이 존경과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모의 길을 기꺼이 따라 갔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이 소외돼 있고, 처우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과학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만 몰두해도 명예와 경제적 보상이 평생 보장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최근 우수한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문과보다는 이공계로 가면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에 입학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 현실은 좀 달랐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남들이 보기에 별난 일들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지만, 군대에 다녀온 이후에는 전공분야에 몰두하게 되었고, 해외에 나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박사까지 마치게 되었다.

그 후 미국 포드자동차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차이를 절감했다. 당시 경제적, 기술적 격차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첨단기술을 어떻게든 조국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귀국 후 창원에서 연구원 생활 12년, 대전에서 한국기계연구원장 6년, 호서대학교에서 교수로 6년 동안 있었다. 국내외 연구계, 산업계, 학계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여러 분야의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국회의원 활동하는 데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정치철학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장점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기술계로부터 받는 성원과 기대도 큰 힘이 된다. 아쉬운 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회에는 이공계 출신 의원이 너무 적고, 정부 고위 공직자도 적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공계 출신이 국회에도 많이 와야 하고, 공직이나 기업 CEO에도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과학기술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협조해서 과학기술인들이 대우받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 적극적으로 도울 것

남은 임기 동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첫째,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국가 전체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출연연 개편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7년 동안 5조2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인재

## 국회의원·우수상임위원장

주관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후원 : 서거정치철학회, 서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

와 연구기관,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인을 국회로 많이 진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생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국회에 온 이유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인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수월성 영재교육, 초일류 인재양성, 장학금혜택, 병역혜택, 연금도입, 정년환원, 과학기술인 국립현충원 건립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다. 이런 과제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기보다는, 앞장서서 씨를 뿌리고 후배 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ST**

# “나는 ‘이공계의 대변인’이다”

배은희 국회의원



이제는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를 하고, 주변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에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매체에 비쳐진 대한민국 정치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진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 한나라당 대변인, 국회의원 배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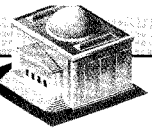
미생물학을 전공한 나는 유학 후 국내에 들어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공부와 연구밖에 모르던 소위 ‘범생’이었다. 그러나 무슨 용기가 났는지 과감하게 연구원 내 창업 1호로 바이오벤처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고, 이후 기업을 경영하던 중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선대본부에서 ‘미래신산업분야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은 것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 한 마디가 정치 참여에 고민을 하던 나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고, 정치 문외한을 결국 국회로 이끌었다. 그 후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그렇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치인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다. 정책연구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문가를 만나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을 듣고, 의원회관사무실과 지역구사무실, 국회 본회의장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또 이공계 출신이라는 이중의 핸디캡에 벤처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이 현장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은 국회의원 배은희의 의정활동 모토가 되었다.



### 현장통! 중소기업 수호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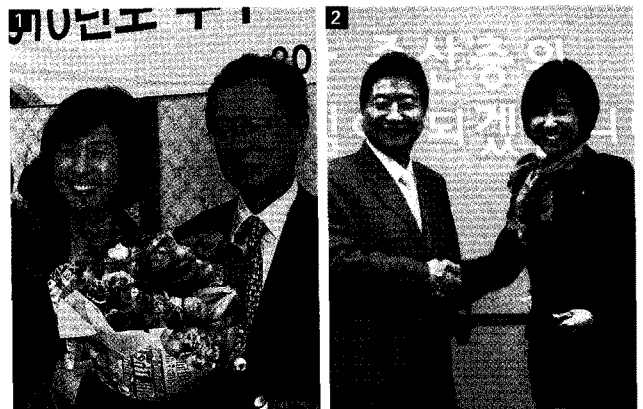
국회 입성 후 전반기에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했다. 제일 먼저 R&D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한 가지씩 지적해 나갔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점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책이 나오고 시행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기술료의 경우, 매출발생과 상관없이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감도록 한 것을 매출발생 이후로 조정하게 했다. 협약 때 내야 했던 민간부담금도 과제종료 시한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모두 중소기업, 벤처, 창업을 꿈꾸는 연구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직접 체험했었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중소기업의 염원이지만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업조정제도'를 미리 법제화해, SSM 등 소상공인의 큰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했다. 저가 낙찰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막는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강화 법률안,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구매 확대 방안 추진 등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때문인지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감사패를 수여해 국회의원 중 유일한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고, '중소기업의 수호천사'라는 애칭까지 만들어 주었다.

초보 정치인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 선진정치경제포럼 대표를 비롯해 정회원 스티디 모임 6개, 준회원 활동 중인 모임까지 총 15개 모임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 선정 18대 국회 입법 우수의원, 동료의원이 평가한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정치부 기자가 선정해 더욱 의미가 있는 백봉신사상, 3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상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과학기술 현장의 대변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국가 R&D 사업에 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나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이끌었다. 조선이자 국회에는 생소한 이공계의원인 나에게 한나라당은, 원내부대표, 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빈곤 없는 나라 만드



▶ 1 2010 우수국회의원연구단체 수상후 기념촬영 2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받고 있는 모습

는 특별위원회 위원, 당 여성위원회 일자리 특위 위원장, 서민행복추진본부 위원,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임무를 맡긴데 이어 당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막중한 임무까지 주었다.

'당 대변인'이 되어서도 이공계, 중소기업, 여성,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지속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말 못하는 동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동물학대에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 강화하는 법안은 법무부가 올해의 핵심처리법안으로 선정한 후 통과 및 시행되어, 그동안 추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법이 하나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또한 "일하는 학부모에게 1년에 6일의 휴가를 주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 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께 중점 추진 업무로 보고하면서 호응도 높아지고 법안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았다.

'이공계인의 대변인'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 육성 정책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에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데에, 과학기술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나의 경력 외에 '당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큰 힘과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연구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던 나에게서는 누구보다 '연구원'이 가장 불편해하고 억울해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감각으로서의’ 개선노력에 집중하게 되었다.

연구과제비 정산 시 ‘비목’이 너무 복잡해 세목 간 집행비를 일일이 나누는데 실제 현장에서 연구원들이 느끼는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의 취지에 맞는 지출이라면 상당부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요구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는데,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연구활동비’ 등이 그것이다.

지출한 건마다 기안, 품의, 결재, 거래명세, 영수증 복사 등 연구자가 일일이 연구비 정산을 위한 각종 집행 증빙 서류에 관여하고, 계획서와 보고서 등 각종 서류작업에 매달려 연구에 몰두하기 힘든 연구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연구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또 하나,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PBS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가 연구 개발 과제를 위해 연구에 몰두해야 할 연구원들을 과제 따오는 ‘세일즈맨’으로 만들고, 보수에 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출연금을 통한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는 경쟁적 정책지정 과제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안정적 인건비로 산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의 실제적인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관 및 실무진을 만나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도 곧 될 것이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고 또 뛴 것이다.

R&D 정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이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쌓은 터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사업에 참여해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과제가 수행되고 나면 구입한 연구장비는 방치되어 고철덩어리로 전락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13조 원 가량의 R&D 예산 중 10% 이상이 연구장비구축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을 정도여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였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

후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선할 부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가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유휴·저활용 장비의 활용을 높여 국가에 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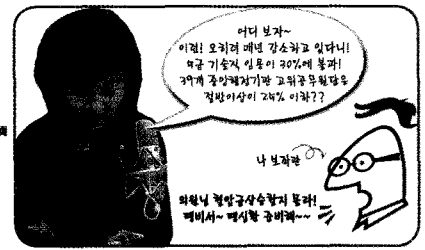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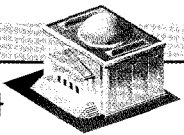
**온라인상에서 대화하고 정책으로 실현**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국회나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은 20명이 채 안 돼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현상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으로 대표되는 이공계 출신들의 노력으로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원동력을 과학기술의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 수급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공계 출신 의원으로서 이공계 육성에 대한 정책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최우선으로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의 하나인 ‘이공계 공직진출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이공계 출신에게 다양한 진출 경로를 열어주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알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단한 노력 때문인지 블로그는 개설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방문자가 7만 명을 넘어서었다.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공감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http://blog.naver.com/behappytalk>).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약속 받다!**

이공계 기피의 핵심은 ‘이공계에 보내거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이공계의 80~90%가 졸업 후 기술계로 진로를 정해 경로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계의 처우나 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 무려 70%의



이공계 출신들이 고용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했는데, 미래에 선택할 직업이 기술부분 밖에 없어 일자리를 가지기가 힘들고, 처우가 좋지 않다면 기피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역할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공직 내 이공계 활용과 지위 개선책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얼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직 내 이공계 임용 확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 법 취지대로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이행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에 만족하고 멈춰 서지 않을 것이다. 이공계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강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나 배은희는 이공계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를 위해 계

속 달려 나갈 것이다."

요즘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얻는 힘은 무엇일까? 그들은 분명 이미 가창력을 인정받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가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기량을 전부 토해내듯 노래를 하고 있다. '나는 인기가수'라는 오만이 아닌 진정한 프로자세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단순한 순위 게임시청이 아닌 감동으로까지 이끌고 있다. 여기에는 시청자를 대리만족하게 하는 청중평가단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나가수가 청중평가단을 통한 국민참여로 성공을 이루었듯이 대한민국의 정치에도 국민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나 배은희는 국회라는 무대에서 '이공계의 대변인'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지지를 얻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 정치인이 될 것이다. **ST**